

통일연구원 2015년 북한 및 통일경제 관련 주요 연구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msj@kinu.or.kr)

통일연구원은 북한 및 통일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매년 활발하게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에 수행한 경제 관련 연구는 북한경제, 남북교류 협력, 통일경제의 세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북한경제 관련 연구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먼저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김석진)이 눈길을 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광산물 수출, 공산품 수출, 남북경협, 해외 노동자 송출, 관광사업)을 개관하면서 외화벌이 추세를 결정할 주된 요인이 중국을 비롯한 대외경제 환경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크게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정치군사 정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추적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홍민)도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평성, 순천, 청진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북한의 시장화가 도시의 공간구조, 도시정치,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당 도시 출신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분석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I.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손기웅·강동완·김경술·김미자·최수영·베른하르트 켈리거)이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린 데탕트’에 대해 4년간 진행되는 연구사업 중 2차 연도 연구이다. 지난 1차 연도에서 DMZ 등 남북 접경지역 중심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그린 데탕트’ 개념에 입각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환경공동체, 경제공동체, 에너지공동체를 동시에 우선적으로 형성하면서 정치·군사·문화적 공동체의 형성도 견인하는 국가전략을 제안하였다.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전병곤·임강택·신종호·김갑식·배종렬)은 중국 랴오둥대 및 연변대와 함께 수행한 국제 공동연구 결과를 요약한 종합보고서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검토하여 북한의 개혁방향을 권고하는 한편,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향후 정세 변화 시, 남북한과 중국 3자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보고서와 함께 발간된 『길림성의 대북 경제협력 실태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배종렬·윤승현)는 길림성 기업의 북한 투자실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II. 통일경제 관련 연구

통일 이후 경제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두 편의 연구가 발간되었다. 먼저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 분야』(조한범·문외솔·송영훈·황선재)는 통일비용 및 편익에 관해 2011년부터 5년간 진행된 연구사업의 5차 연도 총괄보고서로서 그동안 진행된 연구를 종합 정리하여 객관적 전망 결과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분야별, 단계별, 그리고 국내 및 국제 차원의 통일비용·편익을 포괄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김석진·이규창)에서는 통일 이후 경제통합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사회보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과도한 재정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남북한 간 소득격차가 충분히 좁혀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남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 사회보장 문제를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도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방안을 북한지역에 잔류한 주민과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두 경우로 나누어 제시한 것도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